

KMI가 뽑은 2019년 해양수산 뉴스 분야별 TOP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해운·항만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중요했거나 사회적 반향이 컸던 뉴스 TOP 5를 선정하였다.

2019 KMI가 뽑은 해양수산 분야별 뉴스 TOP 5



해양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수립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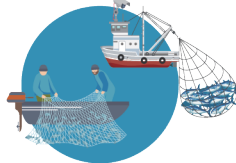
1891년 일본점령지리교과서,
자국영토에서 독도 제외



해양레저관광활성화
대책 확정



수산



수산업 혁신 2030
계획 확정



어촌뉴딜300
본격 추진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2심 승소



양식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원양어선불법어업(IUU)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 통과



해운



해운물류 블록체인
기술도입 가속화



친환경선박 교체 수요증대에
따른 해운운임 상승 기대



조선·해운·정유업계,
선박연료유 규제에 대한 관심 초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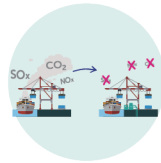
현대상선,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 가입



EU 집행위 '현대중공업·대우
조선 합병' 심층심사



항만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40년까지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 42조원 투자



부산항, 항만연결성
세계 3위 기록



4대 항만공사,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해양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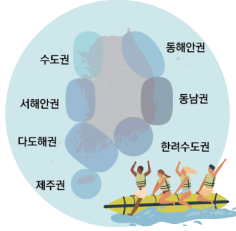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수립



해양수산
신산업혁신전략 추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확정



일본검정지리교과서,
자국영토 독도 제외

〈해양공간계획법 본격 시행〉

해양공간계획법 시행(2019. 4. 18.)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 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 관리계획으로 구성되며,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략은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점유, 스마트 양식 50% 보급, 사물인터넷 기반 항만 대기질 측정망 1,000개소 구축, 해양재해 예측 소요시간 단축(12시간→4시간), 해양수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 아쿠아팜 4.0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부국 실현〉

정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해양바이오산업, 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신산업, LNG, 수소, 전기 등 친환경선박 연관 산업, 첨단해양장비 산업, 해양에너지 산업 등 5대 핵심 해양신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운·항만산업과 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신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기술, 제도, 인력의 4대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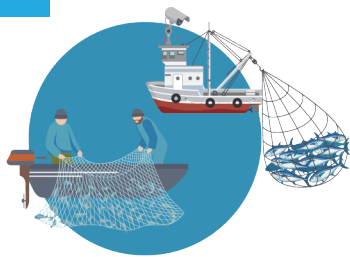
〈1891년 일본 검정 지리교과서, 자국 영토에서 독도 제외〉

1891년 일본 지리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시되지 않아 한국 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본 내무성 지리국 직원 출신인 하타세이지로(秦政治郎)가 쓴 '중등교육 대일본지'를 분석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고유영토론을 반박할 논거를 찾았다"라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확정〉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유형도 서핑, 수중레저, 카누·카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 자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7년 기준 580만 명인 해양레저관광객을 2023년 1,000만 명으로, 2017년 기준 659만 명인 섬 관광 방문객을 2023년 1,000만 명으로 확대하여 해양관광분야에서 3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산분야



수산혁신 2030
계획 확정



어촌뉴딜300
본격 추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2심 승소



양식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원양어선불법어업(IUU)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 통과

〈수산혁신 2030 계획 확정〉

수산혁신 2030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어촌뉴딜 300, 본격 추진〉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이다.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 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 억원, 지방비 9천 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2심 승소〉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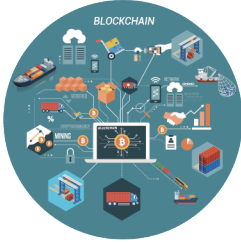
〈양식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장기간 계류돼있던 양식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식산업의 육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과 함께 면허심사 평가제도 도입, 대규모 자본의 양식업 진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즉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양어선불법어업(IUU)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 통과〉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되면서 불법 어업에 대해 형사처분 외에도 과징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대응 조치에는 문제 선박의 2019~2020년 어기 남극 수역 조업 배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해운분야



해운물류 블록체인
기술도입 가속화



친환경선박 교체
수요증대에 따른
해운운임 상승 기대



조선·해운·정유업계,
IMO2020 선박연료유 규제에
대한 관심 초집중



현대상선,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 가입



EU 집행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심층심사 개시

〈해운·물류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속화〉

물류산업에 삼성SDS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물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컨테이너 실시간 추적, 제품이력 추적, 스마트 계약 솔루션 등 효율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물류의 전 과정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이 물류산업에서 주목받고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친환경 선박(스크러버 설치) 교체 수요 증대에 따른 해운운임 상승 기대〉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국제 규제인 'IMO2020'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침체를 겪고 있던 조선과 해운업종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의 증가로 인한 수혜가, 해운은 일시적 공급 부족에 따른 운임단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IMO2020이 시행되면 황 저감장치(스크러버)를 장착하지 않은 선박은 운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급 공백이 생기고, 이것이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면 경쟁력 있는 해운사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유업계, IMO2020 선박연료유 규제 따라 저유황유 생산설비 투자에 박차〉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저유황유는 고유황유보다 만들기가 무척 까다롭고 별도의 기술과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유업계에서는 내년 규제 시행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앞다퉈서 저유황유 생산설비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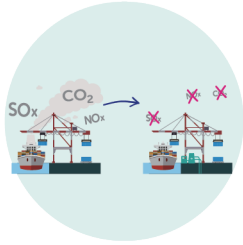
〈현대상선,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정회원 가입〉

현대상선은 2017년 4월부터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2020년 3월로 관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 이에 2018년 하반기부터 3대 해운동맹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디 얼라이언스와의 협력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며, 협력 기간은 10년 뒤인 2030년 3월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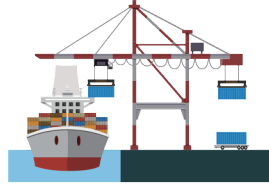
〈EU 집행위원회,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층심사 개시〉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1차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차 심층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진행한 예비심사 결과 해당 합병이 조선시장에서 경쟁을 줄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며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 합병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2020년 5월 7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항만분야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40년까지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 42조원 투자



부산항, 항만연결성 세계 3위 기록



4대 항만공사,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2040년까지 전국 12개 신항만 개발에 42조원 투자〉

해양수산부는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2019~2040)'을 발표했다. 오는 2040년까지 41조 8,553억원을 투자해 부두 총 119선석, 배후 부지 3,956만㎡(약 1,200만평) 조성하고 함께 연간 18억5,0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항만 개발 사업 대상에는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새만금신항 등 기존 10개 항만에 제주신항과 동해신항 등 2곳이 추가 지정됐다.

〈부산항, 항만연결성 세계 3위 기록〉

부산항만공사(BPA)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약(UNCTAD)이 발표한 '항만 연결성 지수(PLSCI)'에서 부산항이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들 중 3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PLSCI는 항만의 선박수용능력, 컨테이너 정기선 입항 빈도 등 6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 900개 컨테이너 항만을 평가해 발표되는 지수다. 부산항은 2006년 77.38p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 101.46p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4.45p를 달성해 전 세계 3위를 차지했다.

〈4대 항만공사, 4차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국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업무협약은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4대 항만공사 공동연구개발 협의체의 운영 결과로, 항만·공사 간 R&D(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국내 항만의 기술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체결됐다. 4대 항만공사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테스트 베드 내 실증사업 시행을 통해 공동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항만 작업자 근로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최근 국내 항만의 물동량 증가 속에 화학제품과 같은 위험 물질을 가득 실은 배가 우리나라 항만을 드나드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를 우선으로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